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2013. 3

진익 · 오병국 · 이성은

머 리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촉발되면서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 안전망 수준은 적용대상, 보장범위, 보장수준 등의 기준에서 평가할 때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공적 안전망 중심의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멀지 않아 국가채무 규모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안전망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보험의 장점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양자를 연계함으로써 복지주체를 다원화하고 있다. 그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사적안전망 제공자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보험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 보험산업의 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토대로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할 수 있다면, 보험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현행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공적 안전망 중심의 현 사회안전망 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 역할의 확대를 통해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과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사회안전망 체제 모색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김 대 식

■ 목차

요약 / 1

I. 검토배경 / 6

1. 패러다임 변화와 관점 전환 / 8
2.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 / 10
3.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 흐름 / 12
4. 사회안전망과 보험산업 관계 / 14

II. 현 사회안전망 체제 평가 / 18

1. 사회안전망 개요 / 18
2. 논의 흐름 / 20
3. 공적 안전망 지속가능성 / 22
4. 경제성장 기여도 / 24
5. 보장성 / 26
6. 공적 안전망의 과제 / 28

III. 보험산업 기여 가능성 / 30

1. 보험산업의 잠재력 / 30
2. 비용효율성 / 32
3. 보장성 / 34
4. 경제성장 기여 / 36
5. 사적 안전망 과제 / 38

IV.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방향 / 40

1. 공·사 안전망 연계 강화 / 40
2. 시장기능 기반 보험산업 활용 / 42
3. 최소한의 공공성 유지 / 45
4. 사회적 민영 보험 모색 / 47

■ 목차

V. 보험산업 선결과제 / 49

1. 국민 신뢰 확보 / 49
2. 혁신 금융 역량 축적 / 51
3. 의사결정 구조 개선 / 54
4.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개선 / 56

| 참고문헌 | / 59

■ 표 차례

〈표 Ⅲ-1〉 금융업권별 자산 규모 및 비중(2012년 3월 말 기준) / 37

■ 그림 차례

- 〈그림 I-1〉 사회안전망에 따른 비용 분담 / 6
- 〈그림 I-2〉 현 사회안전망의 목표효과성에 대한 비판 / 7
- 〈그림 I-3〉 관점 차이로 인한 인식의 편차 / 8
- 〈그림 I-4〉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 / 11
- 〈그림 I-5〉 사회안전망 체제 유형 / 13
- 〈그림 I-6〉 국가별 공공사회지출 수준 / 16
- 〈그림 I-7〉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지출률 / 16
- 〈그림 I-8〉 1인당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률 / 17
- 〈그림 I-9〉 노령화지수 대비 공공사회지출률 / 17
- 〈그림 II-1〉 국내 공적 안전망 도입 현황 / 18
- 〈그림 II-2〉 국내 사회안전망 구성 / 19
- 〈그림 II-3〉 사각지대 현황 평가 / 20
- 〈그림 II-4〉 재정 수입 및 지출 추이 / 23
- 〈그림 II-5〉 주요 재정 지출 항목 추이 / 23
- 〈그림 II-6〉 복지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 25
- 〈그림 IV-1〉 사회적 민영보험 공공성 요건 / 47
- 〈그림 V-1〉 우회축적에 따른 사업모형 전환 효과 / 54
- 〈그림 V-2〉 사업모형 전환 시점 선택 / 55

Social Safety Net and Role of Insurance Industry

The efforts to improve the social safety-net by combining public safety-net and private one have been intensified since the late 1970s. International think tanks and organizations have actively promoted the rationale that markets are more efficient than states at distributing resources and regulating the economy. It is anticipated that public components may play less roles in the whole social safety-net and that more room for private components may be made.

There exist a few good reasons that the development of private safety-nets are promoted to offset cutbacks in or - to prevent the expansion of - public provisions. First of all, many people are still excluded from the public safety-net. Although clos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se matters, a number of efforts have failed due to limited resources which can be mobilized in public safety-net. In addition, a number of experts raise concerns about unfavorable demographic pressures on long-term government financial burden. It is claimed that dependency ratios, the ratio of recipients to payers, would weaken to the point that the public safety-net would be unsustainable.

As an alternative to public ones, the application of private insurance solutions to social safety-net has been promoted. The idea of a growing reliance on private insurance has gained traction in this era of fiscal austerity. The quest for the greater reliance on private insurance would be legitimized by the general consensus among the public, policy makers and insurance industry.

More systematic comparative research may offer unique, crucial insights into understanding why and how the public-private collaborations supported by insurance industry could improve the social welfare. An overarching objective of this report is to address important issues related to policy design.

요 약

I. 검토배경

-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사회안전망 체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사회안전망 체제의 향후 지속가능성, 목표효과성, 비용효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어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능력부여국가(enabling state)로의 전환, 복지주체 다원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체제 전환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공·사 안전망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 사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로 보험산업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보험산업이 새로운 사업모형·관행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산업 경영환경이 과거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보험산업이 거시 경제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 흐름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안전망에 기여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사회안전망 개편 과정에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제의 현황, 민영 보험산업의 잠재력 및 한계 등을 개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사적 안전망 차원에서 민영 보험산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민영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함.

II. 현 사회안전망 체제 평가

- 현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제와 관련하여 성과 및 공·사 부문 간 연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는 3층 구조의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으로 구성됨.
 - 현행 사회안전망 체제에 관한 논의는 사각지대 관련 논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논의, 경제성장 기여에 관한 논의로 구분하여 평가 가능함.
- 안전망 확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공적 안전망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대부분임.
 - 추가적인 안전망 확대 없이 현 사회안전망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과도한 국가채무 초래 가능함.
- 현 사회안전망 체제가 국민부담 증가, 민간부문 생산활동 구축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 이에 세계 각국은 사회안전망과 경제성장 간 선순환 형성을 통해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체제 전환을 시도 중임.
- 공적 안전망의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에서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적용제외, 미가입, 임의탈퇴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보편적 혜택 수준이 국제적 평균에 비해 낮은 상태임.
- 공생발전을 목표로 현 공적 안전망은 개선함과 동시에 공사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Ⅲ. 보험산업 기여 가능성

- 보험산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공적 안전망을 보완하여 사적 안전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금융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민영 보험산업은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제공에 수반되는 국민의 부담비용 대비 보장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선별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가격·서비스 경쟁 과정에서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민영 보험산업은 시장경쟁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보장상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적 안전망을 보충·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상품·서비스 혁신을 추구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니즈에 맞춰 보충·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민영 보험산업은 시장기능에 기초하여 저축·투자의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위험관리 수단 및 중장기 자금의 제공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후방산업과 동반 성장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적 안전망 확대를 통해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의 성과를 개선하려면, 보장 성과 비용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적절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적 안전망의 대표적인 단점은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과 안전망 운영 과정을 보다 효율화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임.
 - 사적 안전망의 시장기능을 활용하면 전체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음.

IV.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방향

-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 각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로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의 개선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
 - 공적 안전망이나 사적 안전망 어느 하나만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에 대응하면서 보장성, 비용효율성, 경제성장 기여도를 개선하기 쉽지 않음.
- 단계적으로 공사 안전망의 연계를 심화시켜 가는 정책 노력이 요구됨.
 - 1단계로,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사적 안전망에 대한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수요 확대 노력을 강화함.
 - 2단계로, 사적 안전망에 대한 수요 확대를 목표로 민영 보험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모형·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화함.
 - 3단계로, 사적 안전망을 통한 공급 확대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통해 민영 보험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함.
-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보험의 장점과 민영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사회적 민영(social-private)” 보험을 제안함.
 - 민영 보험산업이 의존하고 있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가입·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자유경쟁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정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기준 설정이 요구됨.
-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적 안전망 확대가 여의치 않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민영보험을 활용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함.
 -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민영 보험상품·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V. 보험산업 선결과제

- 사회적 민영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려면 사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려는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정책당국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상황임.
 - 시장원리에 따라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 보험산업이 공적 기능으로서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음.
 - 보험산업이 국민·정책당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불신의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보험산업이 선결과제를 극복하고 사적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려면 보험산업에 대해 주어지는 복합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축적이 요구됨.
 -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유지, 금융소비자 만족 등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복합적 요구들을 동시에 달성하라는 것이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임.
 - 상충되는 복합적 요구들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선별, 감시, 효율성, 공공성 등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경쟁우위를 뒷받침할 역량 축적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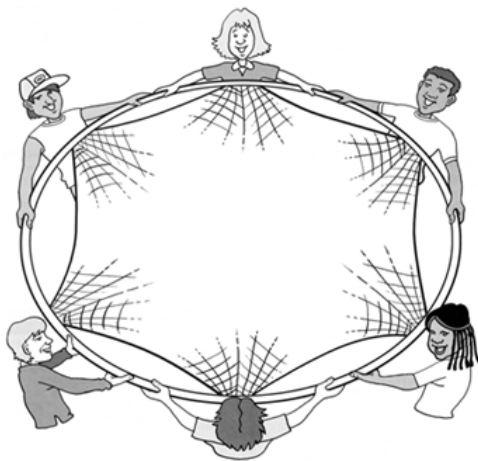
- 장기 지속성장 관점에서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한 사업모형·관행 전환이 요구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역량의 축적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사적 안전망 역할을 위해서는 우회축적 관점에서 일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장기 발전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리더십이 요청됨.

- 개별 보험회사 수준에서 선결과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보험산업 수준에서도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경쟁과정에서 전체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위험에 대응하여, 산업 차원에서 개별 보험회사들 간 이해를 조율할 조정자가 필요함.
 - 다수 보험회사들의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에 따라 전체 사회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I. 검토배경

- 현행 사회안전망 체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현행 사회안전망 체제의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 －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안전망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그림 I-1〉 사회안전망에 따른 비용 분담



- 현행 사회안전망 체제의 목표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함.
 -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 안전망 체제가 애초의 취지나 목표에 비추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됨.
 - － 후세대 교육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한 안전망 제공은 제한적인 반면, 부실 금융기관 구제 등에 대해 과도한 안전망이 제공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그림 1-2〉 현 사회안전망의 목표효과성에 대한 비판



- 현행 사회안전망 체제의, 즉 비용효율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됨.
 - 최근 미국 허리케인 피해 복구 과정에서 안전망 제공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대한 논란이 재연됨.
 - 국가수해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을 통한 피해보상을 믿고, 허리케인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건축 행위를 지속함(New York Times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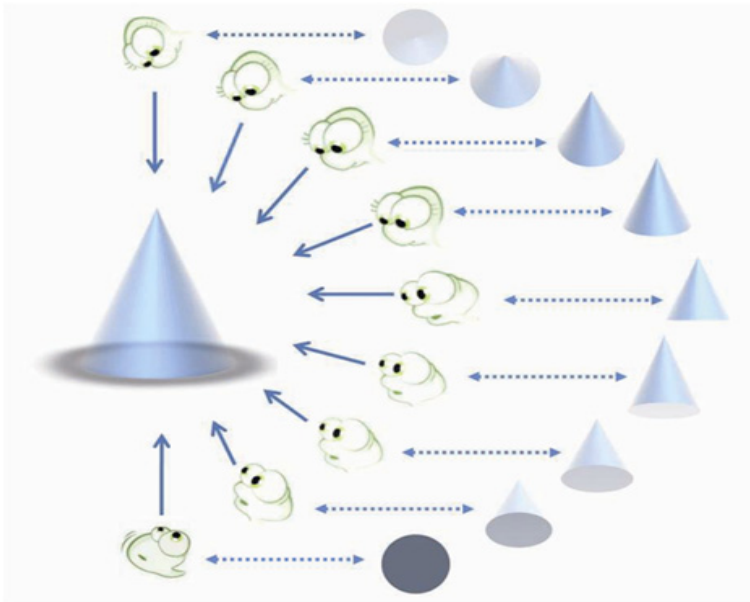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이상의 관점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현행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의 필요성, 바람직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 논의를 소개하고 보험산업과의 관련성을 확인
- 현 사회안전망 체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을 정리
- 사회안전망 체제 관점에서 민영 보험산업의 잠재력과 한계를 검토
- 사적 안전망 차원에서 민영 보험산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민영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

1. 패러다임 변화와 관점 전환

- 최근 여러 분야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복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사회·경제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사회안전망 체제 차원의 경우, ‘복지주체 다원화’를 기본 방향으로 한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사회구조 차원의 ‘New Normal’, 경제시스템 차원의 ‘Capitalism 4.0’, 시장질서 차원의 ‘경제민주화’ 등임.
 - 우리나라가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안전망 체제, 사회구조, 경제시스템, 시장질서 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 간 인식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패러다임 변화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확대됨.

〈그림 I-3〉 관점 차이로 인한 인식의 편차



■ 사회안전망, 보험산업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그러한 인식 차이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함.

○ 한편에서는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보험수요가 비자발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그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존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음.

－ 또한 보험산업 판매채널과 관련하여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용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존재함.

○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기간 중 유통시장이 충분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경우, 공정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체결 시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한 가격이 공정가치이지만, 추후 시장환경 변화 시 환급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 전문성을 갖춘 공급자로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수준의 공정성에 대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보험계약 가격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시장인프라 등이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 사회적 인식 차이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이나 보험산업 지속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사회 구성원들 간 합의를 토대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의 방향과 실행이 가능한 상황임.

○ 보험산업은 유통을 의도하지 않는 장기 계약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지속발전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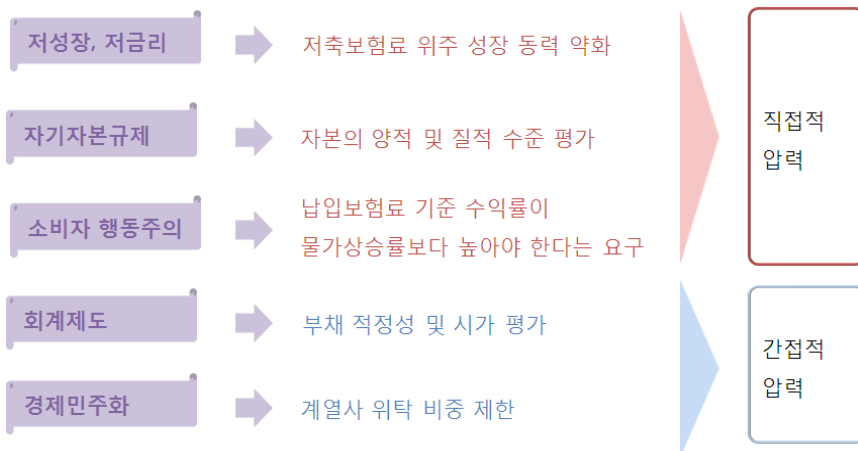
－ 최근 보험산업을 둘러싼 사회 인식, 제도, 경영환경 등에서의 변화를 볼 때, 보험산업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

- 사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변화를 배경으로 보험산업 경영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산업 경영환경이 과거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저성장·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의 기존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임.
 - － 기존 성장동력인 저축보험료 위주 상품(생명의 변액보험, 손해의 장기 손해보험)의 경쟁력이 향후 유지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제고하고 시스템위험 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자기자본규제 등의 규제·감독이 강화됨.
 - － 타 금융업권의 기준을 참조하여 자본의 양적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본 자본과 보완자본을 구분함으로써 질적 수준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소비자 행동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보험상품·서비스의 수수료 부담, 운용수익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됨.
 - － 타 금융업권 대비 차별성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해 수수료 공제 후 유효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됨.
 -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계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자의 감시기능에 기초한 시장규율이 강화됨.
 - － 부채 적정성 평가가 본격화 되고 향후 IFRS에 따라 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잠복되어 있는 자본 부족분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라 보험회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 활용이 보다 제한되면 산업구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 판매 위탁, 자산운용 위탁, 소유관계 등에서 계열회사와의 거래 비중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면 기존 경영전략의 유지가 쉽지 않을 것임.

- 그와 같은 경영환경 변화는 기존의 사업모형·관행에서 벗어나 지속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모형·관행을 탐색하도록 보험산업에게 압력으로 작용함.
- 일부 변화는 활용가능한 경영전략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보험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저성장·저금리로 인한 기존 성장동력 소진, 자기자본규제 등 규제강도의 강화, 금융소비자 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감시기능 강화 등
 - 다른 변화는 이해관계자들의 행태와 교섭력의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시장규율 강화,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그러한 변화의 예임.

〈그림 1-4〉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



- 그와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보험산업이 거시 경제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 흐름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안전망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시도 중임.

3.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 흐름

■ 현재 거시 경제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을 목표로, 그 기본방향, 복지주체들 간 연계 가능성, 재원 마련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배경으로 시장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안전망 확대 요구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경제에 의존하더라도 자유경쟁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보다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경제민주화가 확산됨.
 -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려는 것으로 그러한 목표의 달성 수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가 증가함.

■ 한편, 전 세계적으로 능력부여국가(enabling state)로의 전환, 복지주체 다원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체제 전환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 사회안전망 다이아몬드 논의에 따르면, 복지주체가 다원화되고 그들 사이의 역할 분장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Gran 2003; Jenson 2004).
- 지금까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던 복지국가에서 민간이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부여국가로 전환하는 추세임(Gilbert 1999).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권리와 의무의 연계, 현금 및 증서형태의 간접지출의 확대, 선별주의적 표적할당, 노동의 재상품화 등의 변화가 나타남.
 - 변화의 핵심은 민간부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국가는 해당 영역에서 민간이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 그와 같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공·사 안전망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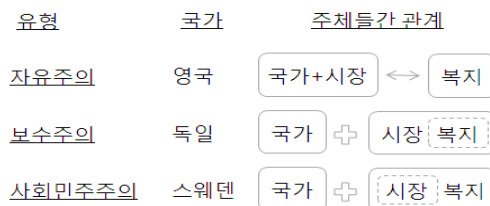
- 연금의 3층(국민·퇴직·개인) 구조, 민영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보완, 장기간병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등이 대표적인 예임.

Box 1 사회안전망 체제의 유형

■ 사회안전망의 세 축인 국가, 시장, 복지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안전망 체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Esping-Andersen 1990).

- 이때 국민들이 시장에 대한 의존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이 구분의 척도가 됨.
 - － 예를 들어, 사회권을 토대로 공적 비소득 급여(non-income benefit)가 증가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어 탈상품화가 제고됨.
-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liberal) 유형에서는 국가와 시장이 연대하며 복지가 시장에 흡수됨에 따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음.
 - － 사회권에 기초한 국가프로그램이 적지 않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고, 공적 비소득 급여는 일부 국민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됨.
- 독일과 같은 보수주의(conservative) 유형에서는 국가와 시장이 강하게 연합하고 복지는 이들과 분리·대치됨에 따라 탈상품화가 중간 수준임.
 - － 사회권이 안전망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국가프로그램도 기여 수준, 생산성 등에 기초하여 운영되므로 재분배 효과가 작음.
- 스웨덴과 같은 사회민주주의(social-democratic) 유형에서는 복지가 국가와 연합하고 시장이 복지에 흡수 및 압도됨에 따라 탈상품화 수준이 높음.
 - － 사회권이 강조되어 국가프로그램(state programs)에 의존하는 공적 급여의 비중이 높고, “보다 큰 평등”이 복지를 통해 추구되고 실현됨.

〈그림 I-5〉 사회안전망 체제 유형



4. 사회안전망과 보험산업 관계

■ 사회안전망에 기여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서비스를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함.
 - － 보험의 기원이나 발전경로를 볼 때, 사회안전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움.
 - －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에서 민영 보험산업이 담당하는 역할의 범위, 수준, 형태 등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수준이 OECD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에 비해 낮다는 인식에 따라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임.
 - － 공적 안전망의 경우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사적 안전망의 경우 GDP 대비 민영 보험산업 보험료 비율을 통해 그 수준을 추정함.
 - － 소득수준과 노령화 수준이 사회안전망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각의 대리변수로서 1인당 GDP와 노령화지수를 채택함.
 - －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5개년(2003~2007년) 동안의 사회안전망 수준에 대해 패널분석을 실행하고 그 추정값을 벤치마크로 설정함.
 - －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현재 수준은 벤치마크 대비 약 4.8~9.7%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사회안전망 개편 과정에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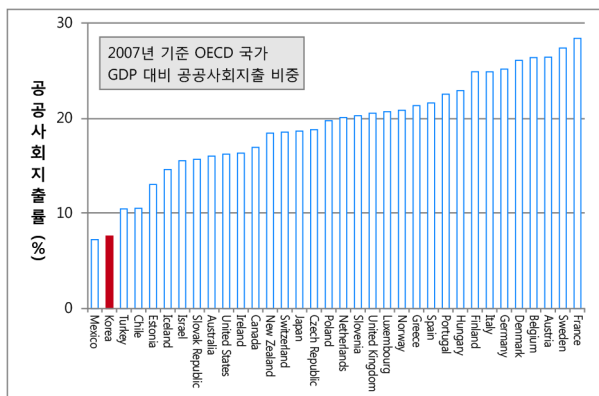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영 보험산업에 사적 안전망 역할이 맡겨질 경우,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 OECD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과의 갭을 고려 시, 향후 보험침투도(GDP 대비 보험료 비율)가 15~2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그러한 보험침투도 상승 여력은 보험산업 외형이 현 수준 대비 약 1.5~2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함.

- 사적 안전망 역할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지속성장 기회가 결정되는 만큼,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거시 경제 차원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그러한 방향의 실행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 사회적 책임 수행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체제의 바람직한 모습, 즉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모습에 대해 함께 모색함.
 - －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에 민영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부문 등에 대해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
 - 보험산업 경영 차원에서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를 통해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사업모형 · 관행 개선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 사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영 과제들을 검토함.
-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제의 현황, 민영 보험산업의 잠재력 및 한계 등을 개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일정한 기준(보장성, 비용효율성, 경제성장 기여 등)에 비추어 현행 사회안전망 체제를 평가하고 한계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함.
 - － 기본적인 관점은 현행 사회안전망 체제의 한계(사각지대, 지속가능성 취약, 비효율적 전달체계 등)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공적 안전망 확대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사적 안전망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 보험산업은 사적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한편 지속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임.

Box 2 공적 안전망 갭 추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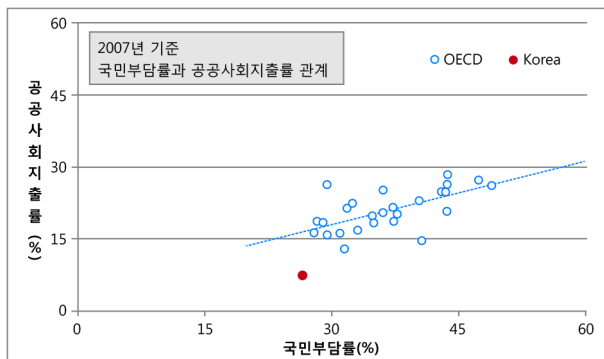
-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 대비 낮은 상태임.
-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7.6%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1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I-6〉 국가별 공공사회지출 수준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26.5%)이 OECD 국가들의 평균(36.0%)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한 벤치마크 수준인 16.5%에 비해 낮음.

〈그림 I-7〉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지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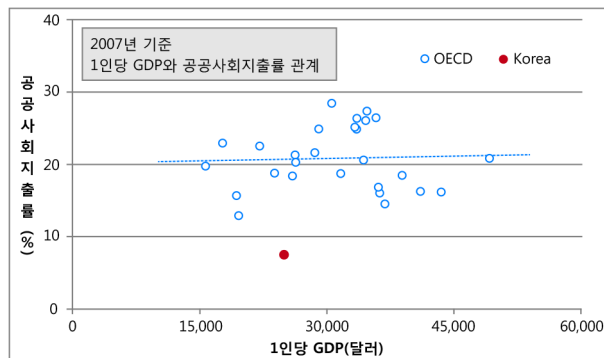


Box 3 공적 안전망 갭 추정 (2)

■ 사회적 환경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안전망 수준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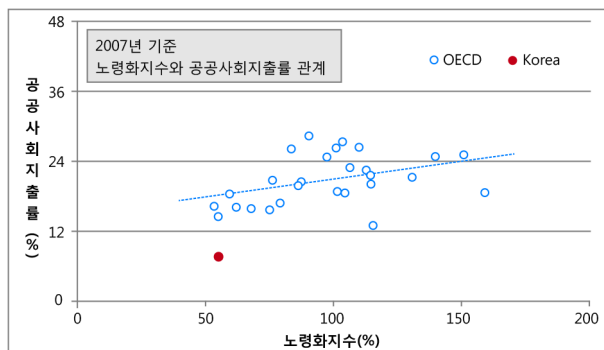
- 우리나라 1인당 GDP(\$24,948)가 OECD 국가들의 평균(\$30,838)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한 벤치마크 수준 20.7%에 비해 낮음.

〈그림 I-8〉 1인당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률



- 우리나라 노령화지수(55.1%)가 OECD 국가들의 평균(96.0%)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한 벤치마크 수준인 18.2%에 비해 낮음.

〈그림 I-9〉 노령화지수 대비 공공사회지출률



Ⅱ. 현 사회안전망 체제 평가

1. 사회안전망 개요

가. 개념

■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 광의로는 사회보장과 같은 의미이며, 협의로는 자신의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장치를 의미함.

- 1997년 외환위기 시,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요구하자 광범위한 복지체제를 사회안전망의 개념으로 흡수함.¹⁾
- 우리나라에서 공적 안전망은 사회적 위험 급증으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1990년 말 이후 빠르게 제도화됨.

〈그림 Ⅱ-1〉 국내 공적 안전망 도입 현황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나. 국내 사회안전망 체제

-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는 3층 구조의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으로 구성됨.
- 공적 안전망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에 의존하여 제공됨.
 - －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으로는 5대 보험제도(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가 시행되고 있음.
 - －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로는 가장 전형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써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이 있음.
 - － 3차 안전망인 긴급지원제도로는 금전 또는 현물의 직접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등이 있음.
 - 사적 안전망은 정부의 각종 지원하에 민간부문이 시장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험을 비롯한 민영 금융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임.
 - － 사회보험에 대응하는 민영보험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공공부조나 긴급지원제도에 대응하는 사적 안전망은 보편적이지 않은 상태임.

〈그림 II-2〉 국내 사회안전망 구성

위험 유형	2차·3차 공적 안전망	1차 공적 안전망	사적 안전망
사망			사망보험
노령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퇴직·개인 연금
건강, 장애	의료급여	국민건강, 장기요양	사망보험, 건강보험
산재, 상해		산재보험	
실업	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보험	
출산, 육아			
자연재해	긴급복지지원	“국가재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

2) 한국노동연구원(2007),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 노동시장 효과를 중심으로」.

2. 논의 흐름

■ 현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제와 관련하여 전체 체제의 성과, 부문별 성과, 공·사 부문 간 연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임.

○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의식을 요약하자면 “현 사회안전망 체제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안전망이 적용되는 범위, 급여·서비스의 배분 방식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생산적 복지 등의 다양한 견해가 공존함.

○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 논의를 체계적으로 조감하기 위해 일관된 분석틀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쟁점들을 세 가지 논점으로 정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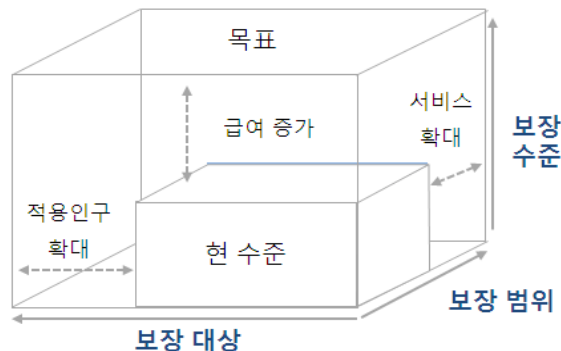
– 현재 제도화된 안전망 수준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로, 사각지대(보장대상, 보장범위, 보장수준 등) 차원에서 논의함.

–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공적 안전망이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로, 복지재정 관련 세입 및 세출 추정에 기초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논의함.

– 현 체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비용 대비 혜택 수준, 경제성장 기여 등의 차원에서 논의함.

○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현 사회안전망 체제의 현황을 개관하고자 함.

〈그림 II-3〉 사각지대 현황 평가



Box 4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의는 복지제도의 원리적인 분류와 상응한다는 점에서 제도중심의 통상적인 논의와 관련성을 가짐.³⁾

○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제적 기준과 무관하게 선별된 일부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체제임.

- － 경제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는,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예임.
- － 경제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따라 일종의 권리로서 제공되는 제도로는,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등이 그 예임.

○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기준(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선별된 일부 사회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체제임.

- －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빈곤대책으로 운용되는 공공부조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하며, 세금이 재원임.

■ 보편을 지향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재정한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준에 의한 선별에서 보편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등은 정부예산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 중 저소득 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통상적임.

- － 사회서비스인 보육, 사회수당인 기초노령연금 등이 그 예인데, 예산 상황, 조세체계, 정치철학 등에 따라 확대 속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

○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좋은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적용대상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을 취함.

- － 대기업에서 시작하여 중소기업, 도시, 지역 순으로 확대가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이 그 예인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임.

3. 공적 안전망 지속가능성

■ 안전망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공적 안전망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대부분임.

○ 추가적인 안전망 확대 없이 현 사회안전망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과도한 국가채무 초래 가능(NABO 2012)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4.17%에서 2040년 91%, 2050년 136%, 그리고 2060년 219%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향후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

○ 재정수입 확대를 통한 대응이 여의치 않음(보건사회연구원 2008).

－ 공적 안전망 위주 체제의 지속을 위해 검토 가능한 방향들 중 하나는 증세(세율 인상, 세금감면 축소)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것임.

－ 현재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 즉 공공복지지출 수준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증세 여력이 제한적임.

－ 향후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세입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 확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음.

○ 또한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대응도 쉽지 않음(조세연구원 2008).

－ 복지지출구조 차원에서 전체 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공적 연금, 건강보험 부문에서의 재정지출은 경직적인 성격이 강하고, 안전망 확대 요구를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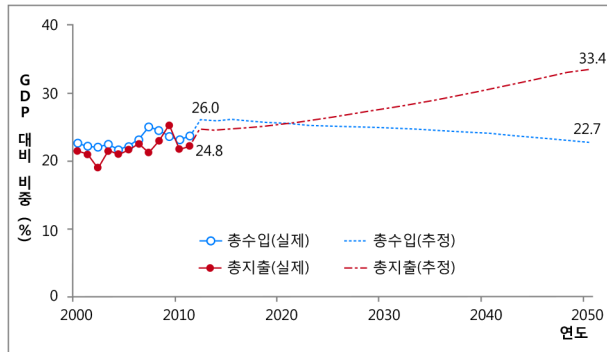
－ 따라서 향후 재정지출 수준의 통제와 더불어 지출구조의 조정을 통한 지속가능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을 참조함.

Box 5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장기 재정 부실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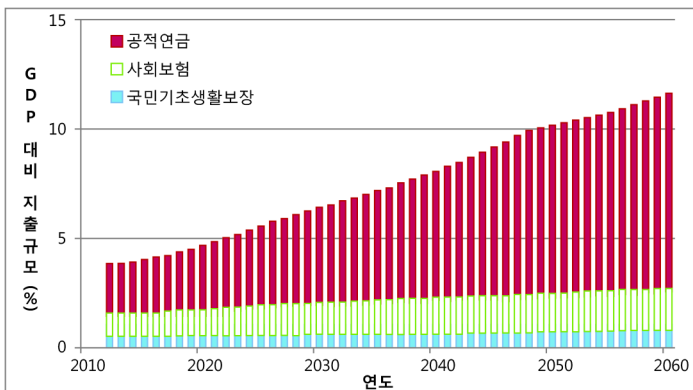
- 장기 재정추계 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지출 확대로 향후 재정적자 폭의 확대가 예상됨(박형수 · 전병목 2009; 전영준 2011).
- 2060년 약 10.7% 재정적자 발생이 예상됨(NABO 2012).

〈그림 II-4〉 재정 수입 및 지출 추이



- 4대 사회보험 지출 확대가 전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GDP 대비 사회보험 1.93%, 공적연금 8.93%까지 지출 확대가 예상됨.

〈그림 II-5〉 주요 재정 지출 항목 추이



4. 경제성장 기여도

■ 현 사회안전망 체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 국제기구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 사회안전망 체제에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OECD 2002)를 참조함.
- 사회안전망 확대가 경제성장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는 이유로 국민부담 증가, 민간부문 생산적 활동 구축 등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지적함.
 - － 세금 증가에 따라 민간부문의 저축·투자가 위축되고, 비생산적 보장 제공에 따라 민간부문의 노동공급 유인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저하됨.
- 따라서 국가경제의 지속성장 관점에서 볼 때, 복지지출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복지지출 구조의 개선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제안함.

■ 현재 세계 각국은 사회안전망과 경제성장 간 선순환 형성을 통해 장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체제 전환을 시도 중임.

-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사회안전망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 사회안전망은 경제주체들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구조 조정, 재교육·취업 등을 촉진하여 경제혁신을 조장할 수 있음.
- 한편, 경제성장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세계 각국이 선순환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로, 생산적 사회안전망 체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스웨덴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 민간부문의 노동공급 확대와 저축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됨.
 - － 세출 차원에서는, 인적 자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건, 교육, 재교육, 구직, 영·유아 보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됨.
 - － 세입 차원에서는, 경제성장 친화적 세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자본 관련 소득, 재산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함.

Box 6 사회안전망과 경제성장 관계

■ 사회안전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가운데, 최근 국제기구들은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제시함.

○ OECD 주요 34개국의 약 30년(1970~1998년) 동안의 경험을 대상으로 총사회지출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에 대해 패널분석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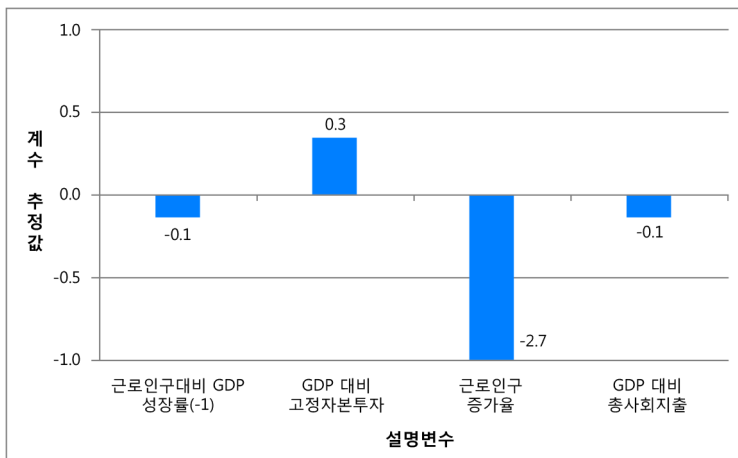
○ 총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 종속변수로 경제성장률(근로인구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을 설정함.
- － 독립변수로 총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을 설정하고,
- － 또한 전기 경제성장률, GDP 대비 실질고정자본, 근로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추가하여 관련 변수로 인한 영향을 통제함.

○ 총사회지출이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 총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함.
- － 총사회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증세가 이뤄지게 되면,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II-6〉 복지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5. 보장성

■ 현 공적 안전망에서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노동연구원 2012).
 - －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기여금(보험료)을 내고 동 제도에 편입된 가입자들끼리 소득단절을 비롯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시스템임.
 - －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지위로 인한 미가입, 사업주의 의무불이행이나 경제적 부담에 따른 보험료 미납 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보고됨.
- 적용대상 면에서, 적용제외, 미가입, 임의탈퇴 등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보장받지 못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상태임(보건사회연구원 2012).
 - － 국민연금의 경우, 2030년에 이르면 보험료 미납부 등으로 인한 무연금자가 30~40%로 이를 것으로 예상됨.
 - － 산재보험의 경우 소액 공사, 5인 미만 사업장 등이 제외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요건 미충족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이 제외되고 있음.
- 보장범위 면에서, 재정 부담에 따라 제외되는 부문이 적지 않으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도 미흡한 상태임.
 - － 건강보험의 경우 상당히 많은 진료(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진료, 건강보험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진료 등)가 보장범위에서 제외됨.
 - －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실업, 파산, 출산, 육아, 자연재해 등)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안전망은 아직 미흡한 상태임.
- 보장수준 면에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보편적 혜택 수준이 국제적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보험미래포럼 2010, 2012).
 - － 공적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2%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약 57%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 공적 건강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율은 약 58%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약 72%에 대비하여 보다 낮음.

Box 7 사회보험 사각지대

-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자 중 납부예외자, 미가입자 등이 존재함.
 - 2012년 3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의 비중은 24%이며, 적용근로자 중 미가입자의 비중은 19%임(유경준 2012).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 대상자 중 체납자, 급여신청 탈락자 등이 존재함.
 - 생계의 어려움으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유형, 자발적 선택(행려, 가출, 주민등록 말소 등)에 따라 체납한 유형 등이 존재함.
 - 2012년 3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의 비중은 10%이며, 적용근로자 중 미가입자의 비중은 2%임(유경준 2012).

- 고용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존재함.
 - 실업급여 수급 비자격자(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청년구직자, 영세사업장,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폐업자영업자 등
 - － 2012년 3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비중은 35%이며, 적용대상자 중 미가입자 비중은 28%임(유경준 2012).

- 산재보험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적용제외자들이 존재함.
 - 비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가사서비스업·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비법인의 사업(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 특수형태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탈퇴한 경우도 존재함.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가입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들이 존재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장기요양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관한 사전적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
 - － 장기요양상태 정도가 1~2등급자에게만 시설급여가 제공되며 입소 시설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6. 공적 안전망의 과제

■ 공생발전을 목표로 현 공적 안전망을 개선해야 할 것임(강신욱 외 2012).

-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던 계층에 대한 안전망 제공, 변화된 방식의 안전망 제공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 우선적으로 증세, 복지재정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험 재원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목적세를 도입함.
 - －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공급체계, 전달체계, 진료비 지불제도 등을 포괄하는 복지재정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함.
- 공적 안전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완화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함.
 - － 가입자의 근로능력 및 소득능력의 손실 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과 급여 지급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통제 가능한 도덕적 해이 발생을 억제함.
 - － 보험료 부과기준(피부양자 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부담능력 보유자의 무임승차를 억제하고 보험료율은 현실화함.
-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보장성 수준을 제고함.
 - －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자영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함.
 -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효율화,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의료비 장기저리융자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사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의 연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복지주체 다원화, 능력부여국가 등과 같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국가재정에 기초한 공적 안전망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다만, 공적 안전망만으로 사회안전망 확대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적 안전망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Box 8 공적 안전망 제도개선 사항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의는 복지제도의 원리적인 분류와 상응한다는 점에서 제도중심의 통상적인 논의와 관련성을 가짐.⁴⁾

-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제적 기준과 무관하게 선별된 일부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체제임.
 - － 경제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는,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예임.
 - － 경제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따라 일종의 권리로서 제공되는 제도로는,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등이 그 예임.
-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기준(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선별된 일부 사회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체제임.
 - －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빈곤대책으로 운용되는 공공부조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하며, 세금이 재원임.

■ 보편을 지향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재정한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준에 의한 선별에서 보편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등은 정부예산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 중 저소득 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통상적임.
 - － 사회서비스인 보육, 사회수당인 기초노령연금 등이 그 예인데, 예산 상황, 조세체계, 정치철학 등에 따라 확대 속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
-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좋은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적용대상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을 취함.
 - － 대기업에서 시작하여 중소기업, 도시, 지역 순으로 확대가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이 그 예인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임.

Ⅲ. 보험산업 기여 가능성

1. 보험산업의 잠재력

■ 보험산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공적 안전망을 보완하여 사적 안전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금융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은 경제민주화의 목표들 중 하나인 “결과의 평등” 달성에 적합함.
 - － 은행상품은 기존에 축적된 부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의 격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임.
 - － 금융투자상품은 거래상대방 중 한 편이 이득을 보면 다른 편은 손해를 보는 일종의 제로섬게임(zero-sum game)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 반면, 보험상품은 손실을 입지 않은 다수의 계약자들이 힘을 모아 사고를 당한 계약자의 손실을 보상하므로 “결과의 평등”에 기여가 가능함.
-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공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보험산업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가 개선될 수 있음.
 - － 비용효율성, 보장성, 경제성장 기여도 등의 차원에서 공적 안전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적 안전망과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저축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험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는 상태임.
 - － 향후 개인·퇴직연금, 변액보험, 장기손해보험, 노후의료비 저축보험 등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저축성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을 참조함.

- 향후 보험의 차별성이 낮은 저축성 위주로 성장하려면 보험산업이 타 금융업권 대비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임.
- － 금융업권들 중 누가 경제성장에 보다 기여하고, 금융소비자의 소득 보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대적 경쟁력이 결정될 것임.

Box 9 경제민주화 논의 흐름

-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근거는 헌법 119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음.
 - 동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시장경제질서를 표방함.
 - 제2항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 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함.
 - － ②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함.
 - － ③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 기존의 경제적 논의를 참조할 때 경제민주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경제민주화는 경제사회의 구성원 간에 이해가 상충될 때 각자가 별 손해 없이 구성원과의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함.
 - － 법 앞에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이 주요 내용
 - 시장경제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와 복지 확대
 - －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경영 의사 결정 참여의 평등, 소유의 평등, 시장경쟁 촉진 등을 통해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추구함.
 - 경제력 집중이 해소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다수가 참가하는 것임.
 - － 불안정과 불평등을 수반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대해 일정한 범위와 수준에서 국가의 개입과 시민사회의 통제를 용인함.

2. 비용효율성

- 보험산업은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제공에 수반되는 국민의 부담비용 대비 보장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민영 보험산업은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선별(screening) 및 감시(monitors)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공적 안전망의 전달체계(공단,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유인을 가짐.
 - 보험산업을 통해 선별 및 감시 기능이 제고되려면, 보험회사와 판매채널 간의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과제임.
 - － 판매채널이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관주의의무(fiduciary duty)에 충실하도록 보상체계의 설계가 필요함.
- 민영 보험산업은 복수의 보험회사들 간 가격·서비스 경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 대비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공적 안전망이 독점적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반면, 경쟁체제인 사적 안전망이 보다 활성화되면 가격 인하, 서비스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공적 안전망의 경우 의무가입이 원칙인 반면, 임의가입 원칙에 따르는 보험산업이 가입 권유에 수반되는 판매비용을 경감하는 것이 과제임.
 - － 최근 5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민영 보험산업이 지출하고 있는 전체 사업비 중 판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4%에 이름.
 - － 이러한 판매비용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의 수익원이고, 설계사 및 중개사들의 소득원으로 제공되고 있음.
 - － 보험산업의 자력만으로 판매비용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Box 10 ▶ 보험산업 사업비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수수료 경감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 판매채널의 고비용 구조에 대한 비판도 확산됨.

○ 핵심업무로부터의 영업수익 대비 판매·관리비용 지출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산업의 비용지출 수준은 은행산업과 유사한 수준임.

－ FY2011년 말 기준, 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익(약 124조 원) 대비 실제 사업비 지출(약 26조 원)의 비율은 약 21.2%임.

－ 2011년 말 기준, 은행산업의 이자·수수료 수익(약 62조 원) 대비 판매비 지출(약 15조 원)의 비율은 약 24.5%임.

－ 각종 부수업무, 투자업무 등으로부터의 영업수익까지 고려한 경우, 보험산업은 약 17.5%, 은행산업은 약 18.3% 수준으로 낮아짐.

○ 보험산업의 경우, 사업비 대부분은 설계사, 대리인, 중개인 등에 지급되는 판매수당으로 그 규모가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다 큼.

－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사업비를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할 때 전체 사업비 중 판매비용에 해당하는 신계약비 비중이 높은 상태임.

－ FY2011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생명보험산업이 지출한 사업비 중 신계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3%임.

■ 판매채널에 대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구조가 개선되면 보험산업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며, 현재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

○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 판매수수료의 이연한도 축소, 부가보험료 체계 개선 등과 같은 제도 개선 효과로 사업비율 하락이 예상됨.

－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직접 설계사에 자문보수로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보험산업 사업비율은 약 9.0%로 낮아질 수 있음.

○ 보험소비자는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고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게 되어 그 동안의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보장성

- 민영 보험산업은 시장경쟁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보장상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적 안전망을 보충·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민영 보험산업은 상호 경쟁 과정에서 상품·서비스 혁신을 추구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의무가입을 전제로 모든 가입자에 대해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적 안전망을 보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검증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 보충적 보완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 및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 축적이 과제임.
 - － 시장원리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경우, 고위험 계층의 가입 기회가 제한되고 보험료가 저소득 계층의 가입여력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음.
- 충분한 가입여력과 가입의향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민영 보험산업은 추가적 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공적안전망이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대상으로 민영 보험산업이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 공적 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보장의 범위, 수준 등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장기저축에 대한 추가적 보완 역할이 확대되려면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요구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운용 역량의 축적이 과제임.
 - － 장기적으로 수수료와 위험수준 조정한 후 수익률이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 － 2012년 상반기에 변액보험·연금의 수익률 관련 논란이 부각되었으나, 보험산업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Box 11 민영 보험산업의 보장성 수준

■ 보험산업은 공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보장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각종 보장서비스를 통해 사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생명보험은 저축보험, 교육보험, 종신보험, 정기CI보험,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 손해보험은 의무보험(자동차, 화재보험 등), 건강보험 등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산업 규모 기준 국가별 순위가 다른 금융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준이며, 보험보급률(GDP 대비 보험료수익 비율)은 11.6%로 세계 5위 수준임.

■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핵심 경쟁력인 보장기능(우연한 사고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장서비스)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임.

- 보험사의 수익성이 강조되면서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주요 질병, 빈발 질병 등에 대한 보장서비스 제공은 회피하는 경향이 지속됨.
 - －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저축투자형 상품 위주의 성장에 주력함에 따라 타 금융업권에 비해 차별성이 약화됨.
 - －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이 정체된 가운데 저축성과 유사한 장기손해보험 위주로 성장하고 있어 해외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임.
- 보장기능은 보험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보장기능이 위축되면 타 금융업권 대비 차별성이 약화되어 지속성장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못함.
 - － 보험산업이 본질적으로 장기 저축에 해당하는 저축성 보험 부문에서 타 금융업권 대비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 판매채널에서의 고비용 구조, 위험자산 관련 자산운용 경험·노하우 부족, 금융소비자의 신뢰 수준 등에서 보험산업이 열위에 있음.

■ 사적 안전망 관점에서도 보장성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현안 과제임.

4. 경제성장 기여

- 민영 보험산업은 시장기능에 기초하여 저축·투자의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민영 보험산업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위험관리 수단 및 중장기 자금의 제공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보험영업을 통해 가계·기업·정부가 기피하는 위험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투자영업을 통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장기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음.
 - 재무건전성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위험 인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임.
 - － 수익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시장원리에 따르는 보험산업이 능동적 위험 인수와 적극적 자금중개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
 - － 사적 안전망 역할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위험 인수·관리와 자금중개에 임하면서 수익성 유지를 위한 선별과 감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민영 보험산업은 다양한 후방산업과 동반 성장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FY2011년 말 기준으로 보험산업 종사자 수는 약 52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인원 대비하여 약 69%에 이룸.
 - 보험산업 종사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매채널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그들간 소득의 편차를 축소하는 것이 현안 과제임.
 - － 영업실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보상체제로 인하여 판매채널 종사자들 간 소득의 편차가 크고 상당수가 소득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 － 특수고용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판매채널 종사들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Box 12 보험산업의 경제성장 기여 여력

- 보험산업은 각종 보험유관업무의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보험산업은 그 특성상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손해사정·보험계리업 등 후방산업이 동반 성장함.
 - － FY2011년 말 기준으로, 보험회사 임직원은 약 6만 명, 보험설계사는 약 32만 명, 다른 유관업무 종사자는 약 14만 명에 달함.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보험상품을 통한 장기저축이 지속성장함에 따라 전체 금융산업 내 보험산업의 경제성장 기여 여력이 커지고 있음.
 -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보험산업은 은행산업 다음으로 자금중개 여력이 풍부한 금융업권에 해당함.
 - － FY2011년 말 기준으로, 보험산업의 자산은 약 559조 원으로서 전체 금융산업의 자산 약 3,106조 원 중 약 18%의 비중을 차지함.
 - 보험산업은 장기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국가경제 내에서 장기 위험자본(long-term risk capital)을 제공할 여력을 갖춘 경제주체임.

〈표 Ⅲ-1〉 금융업권별 자산 규모 및 비중(2012년 3월 말 기준)

(단위: %, 조 원)

구분	생보	손보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기타 ¹⁾	계 ²⁾
자산	426.5	132.0	2,026.4	244.5	65.5	210.9	3,105.8
점유율	13.7	4.3	65.2	7.8	2.1	6.8	100.0

주: 1) 여전사, 금융지주, 신탁, 종금사 등.

2) 저축은행, 여전사는 '11. 12말 기준.

5. 사적 안전망 과제

- 사적 안전망 확대를 통해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의 성과를 개선하려면 보장성과 비용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적절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복지주체를 다원화하고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하여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개선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영 보험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애초의 기대와 달리 사회안전망 체제의 성과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민간부문이 실질적 보장 제공을 기피하고 수수료 수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보장성, 비용효율성, 경제성장 기여도 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함.
 - 전체적인 사회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민영 보험산업이 능동적으로 선별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들의 소득창출능력 제고, 장기 저축·투자 확대 유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망 서비스의 제공이 바람직함.
- 공적 안전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 안전망과의 연계가 바람직함.
 - 현재 공적 안전망의 대표적인 단점은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과 안전망 운영 과정을 보다 효율화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임.
 - 사적 안전망이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공적 안전망은 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적용제외자, 보험료 납부 여력이 부족하여 미가입한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 등이 상당한 수준임.⁵⁾
 - 사적 안전망이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은 가능함.⁶⁾
 - 1970년대부터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정비와 확충을 도모해 온 해외 국가들을 참조하여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5) 2010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약 17,000명 중 3개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의 비중은 약 66.6% 수준임(노동연구원 2012).

6) 사회안전망의 전달체계 개선, 복지재정지출의 효과 제고 등의 차원에서 보면 사적 안전망이 취약계층(저소득층, 고위험군)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Box 13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의 문제점

- 공적 전달체계가 복지수요, 제도 패러다임, 업무성격 등의 변화와 지방화·분권화에 조응하지 못하면서 비효율성을 야기함(보건사회연구원 2012).
 - 우리나라 공적 안전망의 전달체계는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구조로 정착되었음.
 - － 전달체계는 대상자 혹은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흐름을 포함한 관련 조직들 간의 연계,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조직적 연결을 의미함.
 -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이후 기형적 구조로 정착되었음.
 - － 일선 읍·면·동의 복지업무는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담당하게 되었고, 시군구 복지부문 기획관리 부서에는 일반행정직이 대다수 근무함.
 -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기획 및 서비스 수요·공급 관리 역할이 취약하고 업무수행 방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함.
 - － 최근 현금급여와는 전달방식이 다른 서비스들이 확대되고 있으나 적절한 조직구조, 인력배치, 업무분담방식 등의 개선이 지연됨.
 - 다양한 복지제도가 신규 도입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상의 중복을 초래함.
 - － 유사 대상 및 기능의 제도가 단시간에 확대되며 제도별로 각각 다른 선정기준을 갖고 있어 조사를 비롯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 제도개선의 절차가 취약함.
 - －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기능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정보관리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정책 효과가 미흡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부처별, 사업별 공급자위주의 사업을 수행함.
 - －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달과정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음.
- 시장원리에 따르는 사적 안전망이 공적 안전망을 보완하면 전달체계에 경쟁이 도입되어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완화되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IV.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방향

1. 공·사 안전망 연계 강화

■ 공적 안전망이나 사적 안전망 어느 하나만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에 대응하면서 보장성, 비용효율성, 경제성장 기여도를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 모두 현실적인 제약들에 직면해 있음.
 - － 공적 안전망의 경우,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 사각지대 존재,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등의 한계가 존재함.
 - － 사적 안전망의 경우, 임의가입 권유를 위한 비용 지출, 사적 이익 추구에 따른 불신, 취약계층에 서비스 제공 기피 등의 한계에 직면함.

■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 각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면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보장성과 비용효율성은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에 필요한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
 - － 보장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보장서비스가 무원칙하게 확대되고 근로 및 자발적 저축 유인이 감소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 비용효율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사전적 가입 제한과 사후적 급여 지급 심사가 강화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제공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적절히 조합하여 보장성, 비용효율성, 경제성장 기여 등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사회보험은 취약계층(저소득층,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도 보편적 서비

스 제공을 지향하는 만큼 보장성 차원에서 장점을 보유함.

- 민영보험은 적극적 감시를 통한 도덕적 해이 억제와 시장원리에 기초한 효율적 전달체제로 기능할 수 있어 비용효율성 면에서 장점을 보유함.
- 따라서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민영보험의 감시기능(monitoring)을 적절히 조합하면 보장성과 비용효율성을 동시에 달성이 가능함.
-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의 연계 시도는 글로벌 추세에 상응하는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Capitalism 4.0”을 지향하여 정부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진행 중임.
 -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을 위해 다원화되어 가는 복지주체들 사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음.
- 공사안전망을 연계함으로써 제3의 길을 모색하자는 제안이 지속됨.
 - Kaletsky(2010)는 공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과 사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시장의 역할을 연계하는 패러다임을 제안함.
 - Beland(2008)는 연금과 건강보험 부문에서의 공사안전망 연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가별 현황,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음.
 - Thomas and Worrall(2007)은 실업보험 부문에서 공사안전망 연계를 통한 사회후생 제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단계적으로 공사 안전망의 연계를 심화시켜 가는 정책 노력이 요구됨.

- 1단계로,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사적 안전망에 대한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수요 확대 노력을 강화함.
 - 복지지출 구조 조정, 세제혜택, 홍보 및 교육 등의 강화가 필요한데 기존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추가적 논의를 생략함.
- 2단계로, 사적 안전망에 대한 수요 확대를 목표로 민영 보험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현행 사업모형·관행 개선 노력을 강화함.

- 보험산업 사업모형 ·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선행 보고서 “보험산업 비전 2020(2012)”을 참조하기 바람.
- 3단계로, 사적 안전망을 통한 공급 확대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통해 민영 보험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함.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생산 ·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시장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함.
 - 그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민영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하에서 “사회적 민영 보험” 의의, 활용 가능성, 관련 제도 등을 논의함.

2. 시장기능 기반 보험산업 활용

- 민영 보험산업이 의존하고 있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의 가입 ·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경제적 기능 면에서 사회보험별로 독점적 운영체제의 다원화를 통해 경쟁 요인을 도입함으로써 관리경쟁(managed competition)을 유도함.
 -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입자의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공급자들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자유경쟁에 따른 부작용은 억제함.
 - 관리경쟁은 시장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되 자유경쟁의 부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안된 대안적 모델임.⁷⁾
 - 개별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함.
 - 자유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성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설정됨.

7) Enthoven(1993), Bartelsmann and ten Cate(1997) 등을 참조함.

- 인프라 면에서는 개방형 네트워크 형태의 전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사적 안전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가입·전달체계의 비용효율성을 개선함.
 - － 다수의 가입자들과 다원화된 공급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 절차의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해 편의성을 제고함.
 - － 인프라 구축 해외 사례로 미국 “American Health Benefit Exchange”, 호주 독립형 “Superannuation Funds” 등을 참조할 수 있음.
- 제도적 면에서 그와 같은 사회안전망 인프라의 운영을 담당할 주체로서 스폰서(sponsor)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독립적인 스폰서에게 판매·중개·대리 기능과 더불어 자문 기능을 부여하고 그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설계할 수 있음.
 - －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양방향 감시, 즉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사기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
- 사회안전망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는 경우 현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현 전달체계는 복지수요, 제도 패러다임, 업무성격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보장성과 비용효율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 관리경쟁이 도입되면 새로운 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체계적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음.

Box 14 ▶ 관리경쟁(managed competition)

■ 관리된 경쟁모델에서는 시장 참여자가 완전경쟁 하처럼 행동할 인센티브가 있음(Enthoven 1978, 1988, 1993).

- 도덕적 해이, 공급자 유인수요, X-비효율은 특별한 기관, 인센티브, 도구 생성에 의해 제거될 수 있음(Bartelsmann and ten Cate 1997).

■ 관리된 경쟁 모델의 시장 참여자 행동에 관한 세 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음.

- 보험업자는 영원한 독점력 없이 가격, 질, 서비스 범위를 경쟁함.
- 소비자는 보험자 선택의 자유를 가짐.
- 비효율적 공급자는 보험업자에 의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계약되지 않을 것임.

■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성된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관리된 경쟁하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율하고 중개하는 스폰서(sponsor)의 개념이 등장함.

- 소비자를 위한 구매 중개인이며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급하고 위험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동을 감시함.
- 스폰서는 안전망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고 일정한 성과 기준에 따라 개별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분배함.
- 스폰서는 안전망 가입 대상자들에게 가격, 질, 보장 수준, 보험회사의 공동보험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함.

■ 관리된 경쟁 모델의 이상적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소비자 선호를 고려한 분배적 효율성 증가
- 보험업자와 공급자의 경쟁에 의해 기술적 효율 증가
- 투자 결정에서 가격 고려에 의한 동태적 효율 증가
- 규제 시행에 의한 위험 선택 회피와 보건의료 접근성 유지
- 정부에서 시장 참여자로 가격 통제에 대한 책임성 이동

3. 최소한의 공공성 유지

■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자유경쟁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기준 설정이 요구됨.

- 사회후생 제고를 목표로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인 만큼,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자연스러운 요소임.
 - －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자발적 저축만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제한적 합리성을 갖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존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저축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 경제주체들이 미래 시점의 소비에 비해 현 시점의 소비를 과도하게 중요시하는 경향(internality)이 있어 자발적 저축 유인이 크지 않음.
- 공급 측면에서도 자유경쟁 시 ‘죄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 초래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정(coordination)이 요청됨.
 - － 개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으로부터 위험인수를 기피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므로 자유경쟁 시 보장성이 위축될 수 있음.
- 사회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비추어 보면, 전체 사회에 바람직한 결과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
 - － 자유경쟁에만 의존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모색함.
- 시장원리에 따르는 민영 보험산업에 사적 안전망 역할의 확대를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자발적 선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됨.
 - － 세제혜택을 통해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적 안전망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식 검토가 가능함.
 - －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제공에 따른 위험을 모든 보험회사들이 공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검토가 가능함.

Box 15 제한적 합리성과 장기 저축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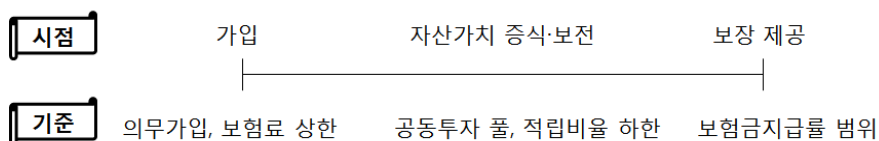
-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존하면 장기 저축이 충분하지 않음.
 -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저축에 대한 유인이 부족할 수 있음.
 - － 경제주체들의 근시안적 사고로 인하여 현재 소비를 과도하게 중시함.
 -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일지라도 정보가 부족하면 시장실패가 발생 가능함.
 - － 소득활동지속 여부, 소득증가율, 인플레이션, 이자율, 자신의 수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저축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 시장실패 발생으로 사적 안전망을 통해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어려움.
 - 개인 차원에서 생존기간 예측이 어려운 장수위험(long-live risk)에 노출됨.
 - － 개별적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사회적 평균수명을 참조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그 이상의 대비에는 소극적임.
 - 장수위험에 대응한 사적 안전망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움.
 - － 안전망을 통해 단명한 가입자가 남긴 연금자산을 장수한 가입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결합함으로써 장수위험에 대응이 가능함.
 - － 그러나 공급자는 체계적 위험인 수명위험(longevity risk)에 직면함.
 - － 의학발전 등에 따라 사회적 평균수명이 애초의 예상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거래를 통해 관리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함.
 - － 따라서 민영 공급자는 높은 가격으로 안전망을 제공함.
 - 금융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사적 안전망에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음.
 - － 종신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자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명한 경우 유산으로 남겨주지도 못하므로 손해라는 인식이 강함.
 - － 경제주체들은 일정한 이익에서 느끼는 효용에 비해 동일한 규모의 손실에서 느끼는 비효용이 더 큼(prospect theory).

■ 수명위험에 대응하려면 공적 개입, 즉 공적 안전망이 요구됨.

4. 사회적 민영 보험 모색

-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보험의 장점과 민영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사회적 민영(social-private)” 보험을 제안함.
 - 사회적 민영보험은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민영보험을 의미함.
 - －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민영보험을 활용하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설정하려는 것임.
 - 사회적 민영보험에 요구되는 공공성 요건들의 예는 다음과 같음.
 - － 민영 보험산업이 광범위한 위험결합(risk pooling)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의무가입은 민영 보험산업이 위험인수를 기피하는 고위험 계층의 안전망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함.
 - － 민영 보험산업이 저소득 계층의 구입능력(affordability)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료의 상한을 설정
 - － 가입자의 비용 부담, 공급자의 위험 노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지급률(가입자 부담 비용 대비 혜택 수준)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
 - －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 장기 수익률을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능동적 자산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투자 풀 조성
 -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적 안전망 확대가 여의치 않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민영보험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 사회적으로 합의를 전제로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민영 보험 상품·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그림 IV-1〉 사회적 민영보험 공공성 요건



Box 16 사회적 민영보험 고려 영역

■ 사회 및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여 공적 안전망이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회적 민영보험을 모색할 수 있음.

- 전통시장 이용객 및 피해상인들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 － 전통시장은 한 번의 화재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만 정부지원이 배제되어 피해자구제 미흡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재난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 － 소상공인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구제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보험료 부담으로 민영보험 가입도 어려운 상황
-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유출 위험이 높은 업종부터 보험가입 의무화 또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도입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 등 정보유출 리스크에 대한 기업 및 국민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
- 관련법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방안 마련
 - － 구미 불산가스, 태안 기름유출 등 대형 오염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해자 보상 및 기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대책 미흡
-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또는 ‘정책성 보험’ 도입을 통해 외국인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 마련
 - － 의료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체계 미비로 인해 의료사고가 증가할 경우 국내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이미지 악화 우려
-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보험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원리에 따른 안정적 위험관리 및 초과손실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
 - －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만병원 폐업, 전문의 지원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출산 인프라 붕괴

V. 보험산업 선결과제

1. 국민 신뢰 확보

■ 사회적 민영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상당한 견해 차이가 발생 가능함.

- 사회적 민영보험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안전망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공적 안전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사적 안전망도 적지 않은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 일정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의 장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합을 모색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도일 것임.
 -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를 유도하고 지원하려는 복지주체 다원화 흐름이나 “능력부여국가” 패러다임에 상응하여 시도 가능한 대안이라 판단됨.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의무보험 사례가 존재하며, 김현수(2012) 등은 건강보험 부문에서 “국민민영건강보험”을 제안하고 있음.
-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선택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의 사고 예방 노력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임.
 -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을 통해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전적인 감시기능을 통해 보험사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의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자발적 선택만으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예로서 “Internality” 논의는 현재 시점의 소비와 미래시점의 소비 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의무적 저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⁸⁾

8) Loewenstein et al.(1993)을 참조함.

- 공적 안전망이 취약한 부문에서 민영 보험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시장원리에 따라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는 민영 보험산업이 저소득 고위험군
위주의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존재함.
- 민영 보험산업의 현 사업모형·관행이 공급자 편의 위주여서 금융소비자
만족을 지향하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
-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 보험산업의 보장서비스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
하면 산업 간, 금융업권 간 형평성 차원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사회적 민영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려면 사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
려는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정책당국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상황임.

- 보험산업이 국민·정책당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
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불신의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보험의 기능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험
산업이 사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음.
- 그 동안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어 온 점, 보험산업이 그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지 않았던 점이 국민·정책당국의 불신을 초래한 원인으로 보임.
- 국민·정책당국과의 교감을 통해 현 사업모형관행에서 불합리한 부분
은 개선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절실함.
- 보험산업의 인식과 같이 국민·정책당국이 보험의 기능 및 특수성을 충분
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신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함.
- 다른 금융업권과 다른 사업모형·관행이 활용되는 배경에 대해 국민·정
책당국의 이해를 구하고, 사적 안전망 역할 담당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금융소비자·정책당국의 인식과 같이 보험산업의 영업관행 중 불신을 유
발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은 공공성 기준에 비추어 개선해야 할 것임.
- 전문성을 갖춘 보험산업이 보험계약을 복잡하게 설계하여 서비스 내용은
만족스럽지 않은데 금융소비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불신을 해소함.

-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경영목표 우선순위가 기존과 달라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사업모형·관행을 전환해야 할 것임.
 - － 공급자의 외형성장보다는 금융소비자 만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 보다 강조되는 상황임을 참조하여 그에 적합한 사업모형·관행으로 전환함.
- 보험계약 공정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시장인프라의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임.
 - －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실패 때문에 금융소비자와 보험산업 간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함.

2. 혁신 금융 역량 축적

- 보험산업이 선결과제를 극복하고 사적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려면 보험산업에 대해 주어지는 복합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축적이 요구됨.
 - 보험산업에 대해 상충될 수 있는 복합적 사회적 요구들을 모든 시점과 모든 상황에서 동시에 대응하라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임.
 - －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적립해 주면서 사업 영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분히 보전하여 수익성을 유지하라는 것임.
 - －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노출은 최소화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지속성장하라는 것임.
 - 상충될 수 있는 복합적 요구들을 모두 수용하려면 역량 축적이 요구됨.
 - － 금융소비자를 만족시키면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서 역량 축적을 필요로 함.
 - － 타 금융업권 대비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상충되는 복합적 요구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복합적 요구들 간 상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비추어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임.

-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이나 실손형 건강보험 보험료 논란은 수익성 유지 요구를 금융소비자 만족 요구보다 우선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사적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려면 지금까지 후순위로 설정하였던 금융소비자 만족 목표를 선순위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큼.
- 복합적 요구들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 금융 역량의 축적이 절실함.
 - 시장경쟁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만족은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근간으로서, 보험산업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임.
 - 선별(screening), 감시(monitaring), 효율성(efficiency), 공공성 등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경쟁우위 확보를 뒷받침할 역량 축적이 요구됨.

Box 17 혁신 금융 역량

- 수요자인 금융소비자, 공급자인 보험산업, 금융정책 당국의 인식은 단기적으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국민·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는 보험산업이 사적 안전망 역할을 위한 근간이므로 외적 가치사슬(external value chain) 개선 역량 확보
 - 금융소비자 만족 제고에 필요한 역량 확보
 - －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광고 역량
 - － 금융소비자의 경험, 상태, 재무목표 등에 따라 차별화된 자문 역량
 - － 금융소비자와 장기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서비스 역량
 - 사회적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역량 확보
 - － 사회적 기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소통 강화
 - － 사회공헌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복지사업 투자 확대
- 부문별(상품·서비스, 판매채널, 자산운용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지속성장 동력이므로, 내적 가치사슬(internal value chain) 개선 역량 확보
 - 상품·서비스 부문에서 고품질 전문의료서비스 역량 확보
 - － 노인요양·건강진료센터·전문병원 등과의 전략적 제휴 적극 활용
 - 판매채널 부문에서 고객맞춤형 자문서비스 역량 확보
 - － 전속채널 자문역량 축적 지원, 개방형 네트워크 적극 활용
 - 자산운용 부문에서 능동적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역량 확보
 - － 위험노출을 일정 수준 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초과수익 달성 추구
 - 적극적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다변화를 위해 글로벌화 역량 확보
 - － 해외 비즈니스 경험·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 확보,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력들 간 협업을 위한 언어능력, 다문화 적응력 확보

3. 의사결정 구조 개선

■ 장기 지속성장 관점에서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한 사업모형 · 관행 전환이 요구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역량의 축적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사업모형 · 관행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기반이 흔들림에 따라 오히려 일시적인 손실에 직면할 위험이 존재함.

– 기존의 주요 상품, 판매채널, 운용대상 등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상당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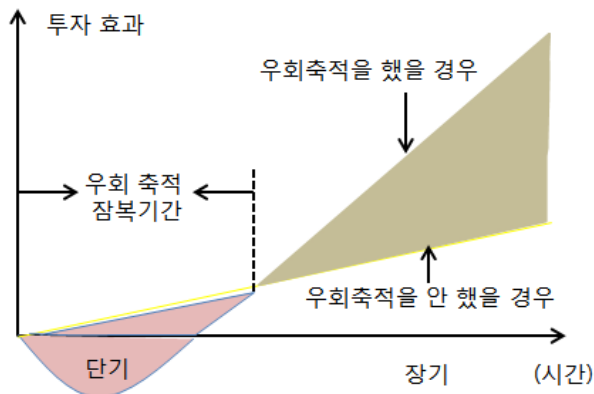
○ 미래의 지속성장을 위해 현재의 경영성과를 희생해야 하는 관계는 우회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윤석철 2010).

– 우회축적은 우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수단매체)을 축적하고, 이후 축적한 역량을 발산시켜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임.

– 우회축적의 전반기 동안에는 우회축적을 안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하게 되므로 조직 구성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음.

– 경영목표를 분명히 정립하고,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식별한 다음 역량의 축적을 위해 요구되는 단기적 희생을 감내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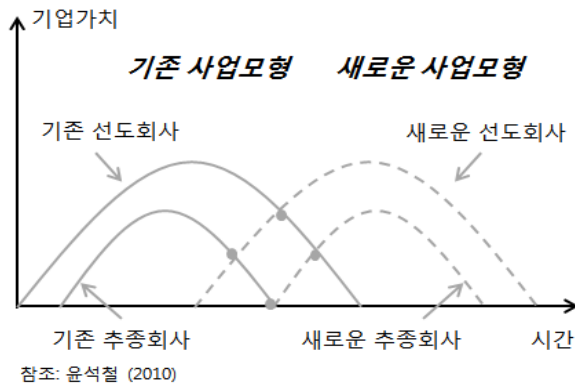
〈그림 V-1〉 우회축적에 따른 사업모형 전환 효과



참조: 윤석철 (2010)

- 사적 안전망 역할을 위해서는 우회축적 관점에서 일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장기 발전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리더십이 요청됨.
 - 이는 일시적 손실을 용인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확립될 때 가능함.
 - 대부분의 보험산업 경영진이 단기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장기 발전 비전의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현 의사결정 구조가 보험산업 지속성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존재함.
 - 대기업집단에 소속되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역할이나 은행 중심 지주회사에 소속되어 은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의구심
 - 보험산업 지속성장 관점이나 사적 안전망 역할 관점에서 보면, 우회축적을 위한 리더십 확립을 위해 보험 중심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요청됨.
- 보험회사별로 각자가 직면한 경영환경, 보유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모형 · 관행 전환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사업모형 · 관행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큰 기존 선도회사의 경우,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큼.
 - 선발자 이익(first mover's advantage)을 고려하면, 전환 시점이 늦을수록 새로운 사업모형 · 관행하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V-2〉 사업모형 전환 시점 선택



4.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개선

- 개별 보험회사 수준에서 선결과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보험산업 수준에서도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경쟁 과정에서 전체 보험산업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산업 차원에서 개별 보험회사들 간 이해를 조율할 조정자가 필요함.
 - 개별 회사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려는 사업모형·관행이 전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 초래 가능함.
 - －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한 영업행위가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거나 시장질서 문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유발함.
 - 전체 산업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와 보험회사들 간 이해상충의 합리적 조율(coordination)을 선도할 주체가 요구됨.
 - － 유독 보험산업 내에서는 시장참여자 그룹 간(생명 vs. 손해, 대형 vs. 중소형, 국내 vs. 외국계) 이해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 보험산업의 현안에 대해 금융소비자, 투자자, 정책·감독당국과의 교감을 주선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도출을 선도할 주체가 요구됨.
 - － 타 산업의 예나 해외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자율규제 체제를 정비하고, 주요 자율규제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수 보험회사들의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에 따라 전체 사회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됨.
 - 위험 인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일 수 있음.
 - － 고위험 계층으로부터의 위험 인수를 기피하고, 갱신형, 금리연동형, 변액, 최저보증 축소 등의 상품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그 예임.
 - 사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보험산업의 위험 인수 기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선택임.

- 사회적 후생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소비자에 비해 위험관리 능력이 우월한 보험산업이 다양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보험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에 필요한 장기위험자본(long-term risk capital)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안전자산 위주의 운영전략을 선택하고 있음.⁹⁾
 - 안전자산 위주의 운영전략에 따라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됨.
 - 반면, 보험회사들이 장기위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던 역할이 위축된 점은 부정적 효과들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보험산업의 능동적 위험인수·관리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창출 정책과 더불어 제도·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안전망 서비스의 공급비용을 낮추는 공급확대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9) OECD, World Bank 등의 보고서를 참조함.

Box 18 보험회사들의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에 따른 부작용

■ 군집행동은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보의 제약 등으로 경제주체들 각자가 독자적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경제주체들의 선택을 모방하는 행태가 나타남.
- 위험 인수의 기피는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보험산업 전체나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 금리확정형에서 금리연동형으로의 전환, 평준보험료에서 갱신형으로의 전환, 최저 보증의 축소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위험을 부담함.
 - － 위험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보험회사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대부분의 위험이 이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안전자산 위주 운용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면에서 합리적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장기위험자본의 위축을 초래함.
 - － 장기 국공채 위주 운용, 신용대출 축소, 장기 투자 축소 등은 국가 경제 내 장기위험자본 공급을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음.
 - － 국공채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부채가치 상승, 안전자산 비중 확대, 시장이자율 하락유발, 부채가치 재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함.

참고문헌

- 강신욱·윤석명·신현웅·박수지·박은경(2012), 「발전적 공생의 복지모델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12-01-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2060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 김현수(2012), 「공공성 측면에서 본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소비자 중심의 민영 의료보험 개선방안」, 한국리스크관리학회·보험연구원 공동세미나 자료.
- 박형수·전병목(2009), 「사회복지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보험미래포럼(2011), 『연금의 진화와 미래』, 논형.
- _____ (2012),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21세기북스.
- 손숙미(2010), 「국내외 사회안전망 현황과 보건 및 복지분야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동향/연구보고서, 대한민국국회.
- 유경준(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 방안 -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유근춘·서문희·임완섭(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1-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철(2010), 『생의 정도』, 위즈덤하우스.
- 이기형(2013), 「신정부 정책공약의 보험산업 영향」, CEO Report, 보험연구원.
- 이병희·강성태·은수미·장지연·도재형·박귀천·박제성(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2-01, 한국노동연구원.
- 전영준(2011), 「조세 재정정책 개편의 재정부담 귀착 분석: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재정·금융 및 재분배의 분석과 정책과제」, 조세연구원·한미경제학회 공동 컨퍼런스 자료.

Anatole Kaletsky(2010),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Bartelsmann, E/P. ten Cate(1997), "Competition in health care: a Dutch experiment", CPB-Report(4).

Enthoven, A.(1993),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managed competition", Health Affairs 12(Suppl.).

Gilbert, N. & Gilbert, B.(1989), *The Enabling State: Modern Welfare Capitalism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Gosta Esping-Andersen(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Gran, Brian(2003), "A Second Opinion: Rethinking the public-private Dichotomy for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Cornell University Press.

Jenson, Jane(2004), "Canada's New Social Risks: Directions for a New Social Architecture",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Loewenstein, Prelec, Vaughan(1993), "Utility maximization and melioration: Internalities in individual choic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6, pp. 149~185.

OECD(2002), "Social Protection and Growth", *OECD Economic Studies* No. 35, 2002/2.

Thomas and Worrall(2007), "Unemployment Insurance under Moral Hazard and Limited Commitment: Public versus Private Provi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vol. 9, issue 1, pp. 151~181.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10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⑩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 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9
- 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2.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진 익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경영전략실 실장)
(E-mail : realwing@kiri.or.kr)

오 병 국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bkfive@kiri.or.kr)

이 성 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인턴연구원
(E-mail : lse6948@kiri.or.kr)

정책보고서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발행일 2013년 3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 판 및
인 쇄 KM 고려문화사

ISBN 978-89-5710-162-9

정가 10,000원